

1.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19년 9월 23일(월), 15:00 ~ 18:00, 서울 아스테리움 3층 주민회의실(KREI 서울사무소 건물)
- 참석 인원 : 15명
 - (분과위원) 박준기(분과장), 김영재(분과위원장), 김현대 위원, 김현아 위원, 엄선희 위원, 임상섭 위원, 정학철 위원, 윤금순 위원
 - (관련 기관) 정혜련 단장(농식품부), 김현용 위원(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), 김태훈 박사, 임영아 박사, 유찬희 박사, 김유나 연구원(이상 KREI)
 - (사무국) 김창호 전문관

2. 회의결과

- (공익형직불제 정의 및 범위) 공익형직불제의 용어와 관련하여 농특위와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공익형직불제의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 존재
 - 농특위 공익형직불제의 범위는 농업은 물론 임업과 수산업까지 포함한 개념임. 예산도 직불제 개편에 더해 예산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농식품부 공익형직불제보다 범위가 큰 것이 특징
- (착수보고) ‘농업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’ 용역과제 착수보고
- (주제발표 주요내용)
 - 공익형직불제 개편방향과 검토과제(박준기)
 - 공익형직불제의 기본 방향은 공익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.
 - 개편체계는 기본지불과 가산지불로 구분, 검토과제로 적용범위, 형평성 확보, 미래농업대응, 지역농정여건 반영 등 검토 필요

- 기본지불은 대상농지범위, 지원단가, 준수조건 설정 등 검토 필요
- 가산지불은 비전과 방향설정, 주체설정, 부가의무수준 등 검토 필요

○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방안(임상섭)

- 농업 부문 다양한 직불제 운용 중이나 임업 부문은 전무함.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 농업-임업 간 소득차이 발생
- 기본지불 대상에 산지 추가 방안 검토 필요함. 산지 형태 유지하고 특정 임산물 재배 임업인에게 기본지불지급할 경우 24~230억 원 추가 재원 필요

○ 공익형직불제 개편방향(정혜련)

- 공익형직불제의 기본방향은 소득재분배(소규모농가 직불제),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, 동일금액지급, 준수의무 강화임.
- 기준연도 변경 시 ①WTO 허용보조 대상 제외, ②예산규모 가늠 어려워 제도운영 안정성 하락 등 문제점 발생 가능성 존재
- 예산규모 확보가 관건이며,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단가가 영향을 받고, 의무준수 수준까지 연계
- 가장 주요한 부문은 의무준수임. 외국은 축산 관련 규정이 많지만, 우리는 논과 밭 중심으로 축산규정이 많이 들어가기 어려우며, 분류상 기본 의무, 선택의무, 타법률 의무로 나누어 놓았지만 농민들이 한번에 지키기 어려움.

□ (향후일정) 농특위 주요일정과 맞추어 소분과 의제선정 및 연구 추진

- 소분과 3차 회의 : 11월 초순 예정
- 분과위원회 : 11월 중순 예정
- 본회의 : 11월 26일 예정